

“야권 탈호남, 민주진영 주도성 약화.. 호남 위기”

“지역경제 성장·인재육성 방안 마련해야”

호남미래포럼 ‘호남발전 간담회’서 주장

“근래에 와서 호남은 민주화 진영에서도 점차 그 주도성이 약화돼가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호남에 대한 지역감정이 자리하고 있다. 애원 내부에서도 호남 출신으로는 집권하기 어렵다며, ‘탈호남론’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이 2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신년 호남발전 간담회’에서 박만흠 한국정치 아카데미 원장은 “지난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가 김대중 후보와 경쟁을 거치면서 호남은 영남패권의 침략적 배제 대상이 됐으며 이 과정에서 호남은 보수 주류세력으로부터는 소외되고 배제된 반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민주, 국조 추진

민주당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는 사안의 심각성이 매우 중대하다”며 “최소한 국조를 실시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검토하고 있다. 책임자 처벌 조치도 강력하게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한길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그릇된 인식이 빚은 참사”라며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했고, 전병현 원내대표도 2월 국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 ‘신용정보대량유출대책특위’를 구성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한편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지난 5년간 1억30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이날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사, 기업, 공공기관 등 58곳에서 1억3752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에 발생한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약 1억건을 포함한 수치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민주화 진영을 주도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권이 의도적으로 호남 배제의 국가운영을 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이미 역사적으로 구조화된 지배권력의 지역적 편재가 그대로 재생산되고 있는 현실이 박근혜정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승주 광주발전연구원장은 “광주·전남의 지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안정적이고 선도적인 제조업 육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2015년 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등 대규모 이벤트를 지역경제 성장을의

계기로 활용 ▲고령화와 청년층의 인구 유출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그동안 광주·전남의 지역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개선”이라며 “지역민들이 그동안 가져온 소비도시, 가난한 도시라는 부정적인 심리를 개선할 필요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수삼 성균관대 석좌교수는 “최근에 호남인재들의 사회적 기여가 과거보다 못하다거나 뛰어난 지도자가 배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박근혜정부 들어서 그 정도가 심화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며 “호남인재들은 우리 역사의 자존과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사회를 이끄는 등불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현실사회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지위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구 미래경영개발연구원장은 “중앙

정부와 지역정부, 그리고 주민과 시민들이 도시·지역·국가의 존재 이유를 무엇을 갖고 측정하고 평가는가에 대한 공유비전을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며 “호남미래포럼’이 충청·영남·강원 등의 비슷한 조직과 함께 대한민국의 공유비전을 함께 측정하고 평가는 동반자가 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에 철학과 지혜를 불어 넣어 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호남미래포럼 한갑수 공동대표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이제는 충청도에도 밀리고 있는 호남의 위상을 어떻게 해야 되찾고 또 이를 이끌고 나갈 인재를 어떻게 기워나갈 것인가를 편협한 지방색의 틀이 아닌 국가의 미래 균형발전을 아래에서 춤춘하고 깊이 있게 그리고 종장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마련, 호남은 물론 모든 국민의 공감을 얻어가면서 착실하게 밟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심부시추 시연회 지켜보는 강운태시장

시연회를 지켜보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이 22일 심부시추 국제심포지엄 참석자들과 함께 서구 치평동 광주 제1하수처리장에서 350톤 규모의 워터해머를 이용한 심부시추

〈광주제공〉

‘박근혜 시계’ 선거법 위반 논란

민주, 선관위에 질의서

여 “앞뒤 안가린 공세”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설을 앞두고 선물한 ‘박근혜 시계’를 놓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새겨진 이 손목시계는 1인당 납선용·여성용 5세트(개수로

는 10개)씩 전달됐는데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이 지난 21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활용’을 언급하면서 구설에 올랐다.

홍 사무총장은 선물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6월4일 잘 안 되면 우리 말마따나 개털이다. 이번에 잘 안 되면 어렵고 힘든 공포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말고”라며 6·4지방선거의 선전을 당부했다.

이에 민주당 김현 의원은 같은 날 ‘박근혜

시계’가 선거법 위반인 아닌지 판斷을 해달라며 중앙선관위에 질의서를 냈다.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도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혈세로 만든 시계를 집권여당 선거운동용 금품으로 전락시킨 선거법 위반 사례다”며 “박 대통령 역시 귀국 즉시 지방선거에서 중립선언을 해 지방선거의 공명정대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앞뒤 안 가리고 정치공세를 하고 보는 민주당은 하루빨리 무책임한 ‘내뱉기 정치’의 늪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반발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투자자” 모심

1. 물 건 : 2013타경 10497(1), 낙찰물건(근린주택)
2. 기 간 : 1년 6개월 정도
3. 보 장 : 근저당 설정
4. 투자금 : 1억원
5. 수익률 : 월10% 확정(년 15%), 기타
6. 내사 방문 상담 요망 (수기동 제일OP 2001호)

6·4 지방선거 현장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 광주시장 출마 선언



품도 품을 수 있다”며 “만년 정치의 전략적 선택지를 벗어나 정치의 주체적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 장성 출신인 이 이사장은 광주고,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경제신문, 한국일보 경제부장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다.

윤장현 새정추 공동위원장 기아차 광주공장 방문



공장 직원들의 품질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기아차의 성공적 경영으로 100만대 생산 목표를 이룩할 수 있도록 힘 닿는데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호권 광주시의회 의장 25일 출판기념회



광주시의회 조호권 의장은 오는 25일 오후 3시30분 광주 북구 풍향동 동신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경제전문가 조호권과 시민이 믿는 행복한 변화’ 출판기념회를 갖는다고 22일 밝혔다.

조 의장은 이 책에 7년여 의정활동을 통해 경험한 지방자치의 제도적 한계와 대안, 작은 공동체와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배용태 전남도 행정부지사 명퇴 신청



전환, 요트마리나 기본계획 수립 등 해양 관광에 중심을 둔 행정을 펼치는 등 한 발짝 앞선 행정력으로 눈길을 끌었다.

한편 그는 오는 2월 말 정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허문수 광주시의원 광산구청장 출마 선언



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녹색 광산 조성 ▲복지정책 구현 ▲교육 인프라 구축과 맞춤형 교육 시행 ▲첨단기술과 친환경 농법을 창조적으로 결합시켜 농민이 잘사는 지역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권일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경매투자

1. 특수비법 배우실 분!
배우면서 투자 가능
교육비 1,200만원

2. 경매물건 사실 분!
싸게 원하는 물건을
최소 비용으로 처리

3.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컴퓨터등 정보 제공
연회비 1,200만원

(주) 오천 경매
H.P 010-3605-5000